

공수처, 尹 29일 출석요구...마지막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직행 않고 추가출석 요구...‘절차 흠결없게’ 신중 모드 ‘내란혐의’ 現대통령 강제수사 대비 명분 쌓기...특검 변수 해석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별도로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일각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약 열흘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48시간 안에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추가 고발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정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리 검토나 조사가 돼 있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

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 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분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

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지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현재 “尹,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오늘 첫기일 그대로

김형두 재판관 “포고령은 국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낮까지 현재에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진 현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수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현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냐는’ 기저질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첫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현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대리인 단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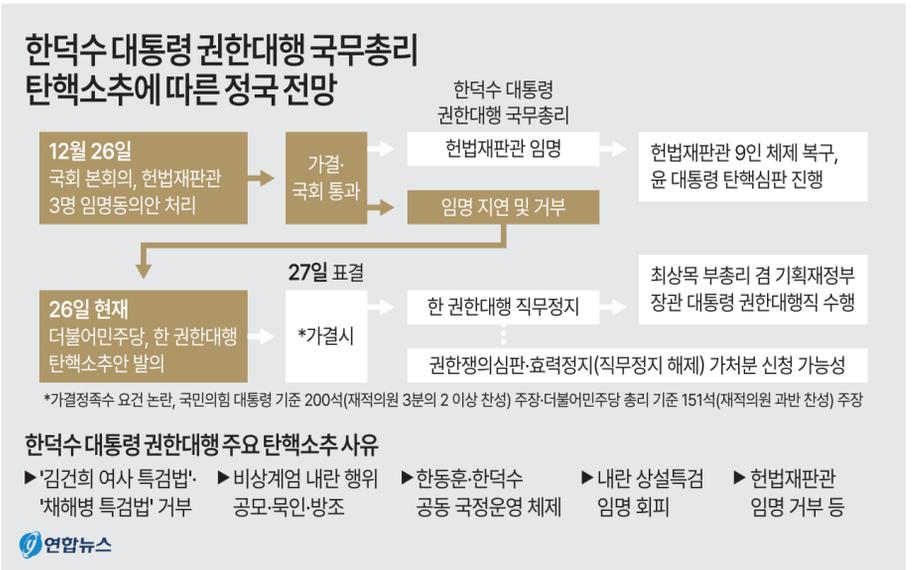
는 질문에는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입증계획으로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와 피의자 신분조서를 각각 현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얻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계엄군 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추경호 前 국힘 원내대표 출석 조율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의사무처 사무총장은 이날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

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수처, ‘햄버거 회동·선관위 촬영’ 정보사 대령 출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고동희 대령을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에는 고동희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을 상대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의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롯데리아 회동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

장에서 도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령은 정 대령과 함께 도 전 사령관의 시조직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장을 위한 별동대 임무를 맡은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비서를 촬영하는 등 선관위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대령과 정 대령, 고 대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추후 정 대령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1면 ‘韓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서 계속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민 다수의 생각과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지적이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공식 선언하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날 SNS를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외환죄 수괴의 대국민 담화 후 조직적 반동이 시작됐다”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수괴 일당의 형량 감경, 증거 인멸 등 대대적 반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 의힘은 윤석열 미동에서 깨어나 국민 속으로 와야 한다”며 “더 이상 내란을 동조, 방치하면 ‘윤건희’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도 페이스북 북에 “내란대행에겐 파면이 답이다”는 짧은지만 강한 의지를 담은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여수)은 “한 대행에게는 탄핵의 철폐가 내려질 것이고 역사는 두고두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체제는 사실상 내란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측 ‘윗선尹길목 차단’ 전략?...장외여론전 다투는꼴

“尹 체포 지시·명단 없고 노상원도尹 무관...계엄 건의 절차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막을 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본인 혐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위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부하수행 등으로 나눠 처벌되는 내란죄 구조상 현재 수사기관이 보는 위계 구도를 흔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가 참여한 의혹 수사에서 통상 하급자만 떼어내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면 이날 전략은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상선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식의 ‘윗선 차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점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래로도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김 전 장관에게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윗선’이자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논리 제시에 주력했다.

변호인단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대부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내용에 관여한 건 오히려 김 전 장관이 포함된 ‘국민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위원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

시했다고 하고, ‘체포자 명단’을 들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라는 장관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최근 점에서 수첩이 발견돼 북풍 공작·사실 의혹의 중심에 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계엄 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이며, 김 전 장관이 당일 국무회의 직전 한덕수 총리에게 얘기한 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연합뉴스